



이슈브리프
ISSUE BRIEF



발행일 : 2021년 3월 25일 (목)

CONTENTS

- 미국의 대중 견제전략 구축과 우리의 선택
- 문 정부의 공공기관 부채 악화 현황과 개선방안
- 국내 OTT 산업의 주요 쟁점 및 정책적 시사점

이슈브리프
(IB 2021-05)

CONTENTS

- I. 미국의 대중 견제전략 구축과 우리의 선택 / 1
 - II. 문 정부의 공공기관 부채 악화 현황과 개선방안 / 13
 - III. 국내 OTT 산업의 주요 쟁점 및 정책적 시사점 / 22
-

발 행 인: 지상욱

편 집 인: 김창배

편집위원: 임춘건, 이종인, 이윤식

편집간사: 이시우

발 행 일: 2021년 3월 25일

발 행 처: 여의도연구원

인 쇄: 디엔시파크

Contents_

이번 호(3월 4째주)는 ▶미국의 대중 견제전략 구축과 우리의 선택, ▶문 정부의 공공기관 부채 악화 현황과 개선방안, ▶국내 OTT 산업의 주요 쟁점 및 정책적 시사점 등 3편의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제1편: 미국의 대중 견제전략 구축과 우리의 선택 (이인배·김태원 통일외교안보실)

바이든 대통령은 첫 행정명령(1.20)을 통해 트럼프 前 대통령 그림자 지우기에 나섰다 음에도 불구하고, 對中 견제정책은 오히려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임. 특히, 미·일 2+2(3.16), 한·미 2+2(3.18), 그리고 쿼드(QUAD) 정상회담(3.19)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들간 연합체 구성을 적극화함.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속도감 있는 대중 견제 정책에 우리는 쿼드 체제의 방향성과 역할, 협력의 방식 등이 결정되기 전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외교안보 전략을 국제사회에 투영시켜낼 필요가 있음

제2편: 문 정부의 공공기관 부채 악화 현황과 개선방안 (한상필 비서관)

2019년 주요 공공기관의 총부채 규모는 497조원으로 자산대비 167.1%에 이룸. 주요 공공기관 부채는 2012년 이후 개선추세였으나 문 정부 들어 다시 악화.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부채 감축계획을 수정·폐기하고, 공공기관 평가기준을 변경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투자 확대를 압박했기 때문임. 더구나 한국판뉴딜사업은 추가적인 재무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이에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재수립 △엄격한 심사를 통한 적정투자 유도 △공공기관 평가체계 개선 등을 공공기관 재무상황 개선방안으로 제시함

제3편: 국내 OTT 산업의 주요 쟁점 및 정책적 시사점 (나경태 연구위원)

예기치 못한 코로나19사태의 영향으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산업은 급속한 성장세를 보임. 문제는 국내 OTT기업들이 비대면 서비스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사이 막대한 자본력으로 무장한 외국 OTT기업들이 국내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점임. 국내 기업이 외국기업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망사용료 및 콘텐츠 사용료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OTT 콘텐츠쿼터제 도입을 통한 적극적인 육성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Ⅲ. 국내 OTT 산업의 주요 쟁점 및 정책적 시사점

작성: 나경태 연구위원 (na.kaeng.tae@ydi.or.kr)

예기치 못한 코로나19사태의 영향으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산업은 급속한 성장세를 보임. 문제는 국내 OTT기업들이 비대면 서비스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사이 막대한 자본력으로 무장한 외국 OTT기업들이 국내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점. 국내 기업들이 외국기업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망사용료 및 콘텐츠 사용료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OTT 콘텐츠쿼터제 도입을 통한 적극적인 육성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

1. 국내·외 OTT⁴⁾ 산업 현황

□ 글로벌 OTT산업, 매년 급속한 성장세

○ OTT 대표주자 Netflix(넷플릭스)가 최근 괄목할 만한 성장세 시현

- 2020년 유료 구독자 수⁵⁾가 총 2억명 넘어섰으며, 지역별로는 아시아 2,549만명, 유럽·중동·아프리카는 6,670만명을 기록함
- 2020년 매출은 250억 달러, 영업이익은 46억 달러를 기록하며 각각 전년 대비 24%, 76% 증가

4) OTT(Over The Top, 온라인동영상서비스)는 기존 지상 전파가 아닌 인터넷 연결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를 말함. 현재 OTT 용어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는 상태이며 방송법에 넣을 것인지, 통신법에 넣을 것인지, 새로운 법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음. 현재 OTT 사업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하고 있음

5) 머니S, “넷플릭스, 세계 유료 가입자 2억 돌파… 2020년 영업이익 76%↑” 2021.1.20.

- 2020년 콘텐츠 제작 예산만 아마존의 두 배가 넘는 173억 달러(약 19조원)에 이르고 올해는 190억 달러(약 21조원) 투입이 예상됨
- Netflix 이외에도 아마존 비디오, 텐센트 비디오, 디즈니가 새롭게 OTT 시장으로 진입하여 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 특히 아마존 프라임비디오와 아마존닷컴이 개발·운영하는 비디오 인터넷 서비스는 전 세계 구독자 1억5,000만명을 보유하고 있음

□ 외국 OTT기업에 의해 주도되는 국내 OTT 유통 시장

- Netflix의 2020년 국내 결제금액은 5,173억원으로 전년 2,483억원 대비 108% 증가. 2020년 12월 결제 금액은 587억원으로 월별 기준 역대 최대 금액임
- 이를 바탕으로 추정한 유료 결제자 수는 총 410만명 추정⁶⁾
- 국내 OTT 서비스는 가입자 수가 많이 늘긴 하였지만, Netflix에 비해 1/3 수준임

〈표 III-1〉 2020년 국내 OTT 서비스 업체와 구독자 수

	구독자 수	OTT 사업자
웨이브	296만 명	SK텔레콤
티빙	237만 명	CJ ENM, JTBC
U+모바일tv'	226만 명	LG유플러스
'왓차	164만 명	국내 벤처
시즌	146만 명	KT

6) 애플리케이션·리테일 분석서비스 와이즈앱(2020년 12월)

- 국내 OTT시장은 점유율⁷⁾ 을 보면 거의 외국계 기업이 장악
 - 유튜브 62.3%, Netflix 16.3%, 페이스북 8.6%, 네이버 TV 4.8%, 웨이브 3.2%, 티빙 3.0%, 아프리카 TV 2.6%
- 국내 OTT 기업, 자체 제작 히트콘텐츠 발굴이 쉽지 않은 상황
 - Netflix 성공비결은 자체 콘텐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
 - Netflix는 자본을 투자해 배우와 작가 감독을 섭외하고 있으며, 한 차원 높은 CG(컴퓨터그래픽), 글로벌 마케팅까지 활용
 - 하지만 이제 첫 걸음마 단계에 있는 국내 OTT는 사실상 Netflix와 경쟁이 되지 않음⁸⁾

2. 국내 OTT 산업 관련 주요 쟁점

- 망사용료에서 국내 기업에 역차별 발생
 - 외국 OTT 사업자는 국내에서 망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국내 OTT 사업자만 망사용료를 지불하여 역차별을 받고 있음
 - Google(구글)의 하루 트래픽량은 국내 전체의 25.9%로 카카오(1.4%)의 18.5배, 네이버(1.8%)의 14.4배지만 통신업체에 망사용료를 내지 않음
 -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매년 총 1,000억원 이상의 망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짐⁹⁾

7)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8) 오피니언 뉴스, “치열해진 ‘오리지널’ 제작 경쟁... '넷플릭스' 넘어설 수 있을까”

9) 과학기술통신부 2020년 4분기

○ 외국 OTT 사업자(유튜브, Google, Netflix)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급격한 트래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캐시서버¹⁰⁾구축 비용을 국내 통신사에 지급하고 있어 동등하게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고 반론

- 국내로 들어오는 망 구축비용은 본인들이 지불했으며, 반대로 미국, 유럽에서 국내 OTT 서비스를 이용할 때 망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음

○ 매년 Google, Netflix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망사용 무임승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지만, 본사의 방침을 따른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망사용료 문제가 지속해서 유아무야되고 있음

□ 외국 OTT 서비스의 법적 규제 강화 방안 제기

○ Netflix가 급속하게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OTT 상영 콘텐츠 비율 중 국내 콘텐츠를 유럽처럼 30%로 하자는 의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5일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인터넷동영상 서비스 법제도 연구회’ 3차 회의를 개최

• OTT 저작권·저작권접권 관련 이슈와 함께 특히 유럽의 콘텐츠 쿼터제 제도화 현황 등이 논의되고 있음

- OTT 콘텐츠쿼터제에 대해 정부에서 처음으로 논의가 시작됨

○ 이에 대해 방송과 기존 미디어 시장과 비교하면 아직도 OTT 비중이 그리 크지 않아 선불리 규제하면 국내 OTT 서비스의 경쟁력까지 오히려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¹¹⁾ 는 지적이 나옴

10) 캐시서버(cache server): 인터넷 사용자가 자주 찾는 정보를 따로 모아두는 서버로, 인터넷 검색을 할 때마다 웹서버를 가동시킬 경우 발생하는 시간을 절약해 주는 네트워크 장비

11) 입법조사처,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국내 시장 진입에 따른 쟁점과 과제(최진응)

□ 국내 OTT 사업자의 음악 저작권료 징수

- 2020년 7월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OTT에 사용되는 음원과 관련해 저작권료 2.5% 지불을 요구하였음
 - 음저협이 국내 OTT에 외국 Netflix가 지급하고 있는 2.5% 요율의 저작권료를 요구하자 국내 OTT 사업자 측은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에 따른 0.56% 수준을 주장하고 있음
 - 그동안 별도 징수규정이 없어 국내 OTT사업자들이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음원을 사용해 왔음
-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12월 12일 음저협이 7월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함
 - OTT에 적용될 '영상물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하고, 음악 저작권 요율을 올해 1.5%부터 오는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영상물 전송서비스 저작권료 해외 사례¹²⁾: ▲독일(GEMA) 3.125%, ▲프랑스(SACEM) 3.75%, ▲일본(JASRAC) 명목 요율 2%(실질요율 1.5%), ▲캐나다(SOCAN) 1.9% 등
- 현재 국내 OTT 사업자는 △Netflix와 국내 영상물 간 다른 저작권 체계 △이중징수 문제 △절차적 위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행정소송에 돌입하였음

12)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0년 12월 12일)

3. 국내 OTT 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 OTT 산업발전을 위한 ‘선(先)성장, 후(後)규제’ 원칙 정립 필요

- 선부른 규제보다는 관련 산업에서 자율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먼저 마련해야 함
- 음원 저작권료 문제도 법적 규제보다는 음저협과 OTT 기업 간 자율적으로 매듭을 풀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중재노력이 적절

□ 국내 IT(OTT) 기업에 대한 역차별 해소 방안 시급

- 역차별하면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Google은 지속해서 망 무료사용, 세금 미납부 논란에 이어 최근에는 앱 수수료 과다 부과, 뉴스 공짜 사용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음
 - 이에 대한 규제책으로 인앱결제¹³⁾강화 금지, 국내 법인에 대리인 지정¹⁴⁾, 법인세 6천억원 추징¹⁵⁾등이 추진
 - 하지만 Google은 국제 분쟁 및 소송으로 맞서고 있음
- 하지만 Google은 뉴스 콘텐츠는 아무런 과정 없이 무료로 사용하는 등¹⁶⁾ 역차별 문제가 여전한데 관리 주체인 정부는 10년째 방치
 - Google은 아직도 신문법상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미등록 상태일 뿐 아니라 청소년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도 미지정

13) 구글은 올 4분기부터 앱내 모든 디지털 콘텐츠 결제 시 인앱결제(In-App payment)를 의무화하고 수수료를 일괄 30%로 인상한다고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구글이 거둬 들일 비게임분야 수수료가 무려 885~1.568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

14)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8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강제하고 있음

15) 국세청은 간주 고정사업장 개념을 적용해 2020년 1월 구글코리아에 법인세 약 6천억원을 추징했으나 구글코리아는 추징 세액을 납부하는 동시에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

16) “공짜뉴스 재미 본 구글, 세계 곳곳서 제동...한국은 아무 규제 안해” 조선일보, 2021.3.10

- 주요 선진국들의 대처방안 등을 참조하여 망사용료, 과세, 뉴스 사용료 등과 관련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
-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는 3월 12일, 10일 발의된 '2021 언론경쟁 유지법'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
 - 이 법안에 따르면 주 1회 이상 기사를 작성하는 미국 내 모든 신문·방송·인터넷매체가 연합해 Google, 페이스북 등 뉴스로 이익을 남겨온 플랫폼 기업과 협상에 나설 수 있음
- 주요국들은 뉴스를 공짜 사용하는 Google에 대해 다음 대책을 시행
 - EU, Google의 뉴스 공짜사용에 대해 링크세(Link Tax) 부과
 - 호주, 미디어 기업 세븐웨스트미디어에 뉴스 콘텐츠 이용료 지불 합의
 - 프랑스, 뉴스정보제공자연합(APIG)에 뉴스 콘텐츠 이용료 지불 합의

□ 국내 OTT 산업 육성을 위한 'OTT콘텐츠쿼터제¹⁷⁾' 도입

- 소비자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잘 만들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 우선은 OTT 산업이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때까지 소위 'OTT콘텐츠쿼터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
 - 유럽에서 OTT쿼터제¹⁸⁾를 도입하였고 국내 영화 분야에서도 쿼터제가 주요한 성공요인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

17) 국내 영화 보호를 위해 국내 영화를 정한 비율 만큼 상영하도록 하는 스크린 쿼터제와 유사. 국내도 1966년 스크린 쿼터제 법제화 후 현재 연간 국내 영화 상영일 수를 73일로 규정

18) 유럽연합(EU)은 2018년 말 넷플릭스, 아마존프라임 등 미국 OTT 플랫폼에 맞서 EU시청각서비스지침서를 개정. 해외 OTT 사업자에게 유럽 저작물을 의무 제공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음 이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 보호를 이유로 자국 콘텐츠 의무 편성 비율을 30%로 규정

여의도연구원은 각종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전망, 대응방안을 담은
〈이슈브리프〉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민의힘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